

민주, 당대표 선거 ‘선호투표제’ 도입… 내일까지 후보 등록

계파 간 갈등 일단락

후보등록 후 21일부터 예비경선
대표 후보 3인, 최고위 후보 8인 추려
‘선출직 최고위원제’ 도입 무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15일 8·17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서 선호투표를 도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일주일 넘게 지속돼온 계파 간 갈등이 일단락됐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방법을 의결해서 당무위 안건으로 부의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고위는 선호투표제 도입 안건과 함께 전략지역(대구·경북·경남) 대의원과 권리당원 유효투표에 기중치 5%를 주는 안건도 당무위에 부의했다. 당은 16~17일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등록 후 21일부터 예비경선을 치러 당 대표 후보는 3인으로, 최고위원 후보는 8인으로 추리기로 했다.

선호투표제는 결선 투표의 한 방식으로, 3인 이상 경선에서 투표자는 3명의 후보의 선호 순위를 적어 투표한 뒤 최하위 득표자의 2순위 투표를 나머지 후보에게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득구 최고위원,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황, 박지원 최고위원. /뉴시스

각각 가산해 단 한 번의 투표로 당선자를 가릴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전준위)는 이를 의결해 최고위에 보고했으나, 친청(친정청)계 최고위원들의 반발로 재논의를 거쳐 최고위에서 의결됐다. 선호투표제 도입 안건이 당헌당규에 위배된다며 반대하던 정청래 후보도 전날(1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승적인 차원에서 존중하고 수용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전준위 의결에도 친청계 의원들의 반발로 도입이 무산된 선출직 최고위원제를 두곤 공개 최고위에서 계파 간 갈등이 드러났다.

친명(친이재명)계 최고위원은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청년들의 민심을 당에 반영하기 위해 청년최고위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친청(친정청)계 최고위원은 청년최고위원제가 당헌당규에 위배되며, 특정 계파의 청년 최고위원 후보를 지도부의 밀어붙이기 위한 속셈이 있다고 봤다.

친명계 황명선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에서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표현했다. 그는 “청년의 목소리를 당의 중심에 두자는 최소한의 제도조차 거부하면서 무슨 당원주권을 말하고 당의 미래를 말할 수 있나”라

며 “청년의 손을 뿌리친 결정에 동참한 분들은 당원주권을 말할 자격도 당의 미래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친청계 박규환 최고위원은 “왜 애당초 불가능한 안을 제시하고는 받아주지 않는다고 때를 쓰고 마치 청년을 외면하는 사람인 양 비난하고 이게 무슨 해괴한 짓인가”라며 “한다고 치자. 후보 등록하고 선거운동 준비할 시간이 며칠이나 되나. 그 며칠 안에 과연 얼마나 많은 청년 당원들이 청년 최고위원에 관심을 갖고 출마할 수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당대회 물 외에도 당 대표 후보들은

직접 신경전을 벌이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송영길 의원은 MBC라디오에 출연해 당권 경쟁자인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 “이재명 대통령보다 먼저 국회의원이 되지 않았나”라며 “대통령을 아래로 깔아보는 느낌이 있더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정 전 대표가) 공사가 구분 안 된 게 아닌가”라며 “대한민국 대통령, 국민이 선택한 국가 원수로서의 존중이 있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존중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 전 대표가 독자적 자기 정치를 계속 고민해 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정 전 대표가 6·3 지방선거에서 경기 평택을에 후보를 낸 것을 후회한다고 말한 것을 두곤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 아닌가”라며 “자기 아들한테 내가 너 낙태했어야 되는데 낳았다”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 전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송 의원이 자신을 ‘역적’에 비유하고 ‘목을 잘라 정발 전입을 해야 할 그런 상황’이라고 한 것을 두고 “전당대회 출마가 목숨까지 위태로운 일인가. 섬뜩하고 무섭다”면서 지지층에 호소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metro

광주 간 장동혁, 투표용지 부족 장외투쟁

잠실·인천·부산 거쳐 광주서도 시위
“특검법 미반영땐 제한절행사 불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사진)가당일각에서 제기되는 자신에 대한 비토 여론에도 불구하고 참정권 침해 논란을 촉발시킨 6·3 지방선거 일부 투표소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장외투쟁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장 대표는 8일과 12일 각각 인천과 부산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시위에 참석해 시민 참정권 훼손을 규탄했다. 7일에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에 참석해 ‘고등학생 말고 나랑 싸우자’며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손팻말을 들기도 했다.

이날은 시민운동현장을 방문하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았다. 또한 장 대표는 국민과 당원을 향해 제한절인 17일 올림픽공원에서 열리는 규탄 시위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다. 장 대표는 시위에 참석할 때마다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어, 지



방선거 이후 장 대표에게 책임을 돌리는 당 일각을 상대하기보다, 참정권 규탄 시위에 모습을 드러내며 대정부 투쟁의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장 대표는 참정권 훼손 논란을 일으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수사하는 특별검사제도를 언급하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야당에게 추천권한이 있는 특별법안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17일 국회에서 열리는 제한절 행사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선관위 특별법안을 제출하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제3의 기관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펜앤드마이크 유튜브에 출연해 민주당의 제3자 특검 추천권 부여에 대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예를 들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에서 특검 후보를 99명 추천하고 중립적이지 않고 민주당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특검 후보 단 한 명만 추천한다면 아무 의미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장 대표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을 두곤 “한 사람을 우리 편으로 데려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데려왔을 때 힘과 에너지가 강해져야 통합이든 덧셈정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며 “사람 숫자가 늘어났다고 해도 전력이 떨어지거나 마이너스가 된다면 사람이 늘어나도 뺄셈정치”라고 지적했다.

장외투쟁을 지속하는 장 대표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않다. 5선 중진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선거 패배에) 대표로서 책임지는 것이 원칙인데, (장 대표가) 당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부분을 고민하지 않고 있다”며 “나중에 이지도 체제가 어떻게 되든, 장 대표는 사퇴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장 대표가 중점을 두는 장외투쟁과 관련해 “당 개혁보다도 바깥 돌아다니면서 장외 집회 하고 있지만 거기서 무엇을 하는지 우리 당은 아무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박태홍 기자

국민의힘 ‘범죄 피해자 보호 3법’ 당론 발의

檢 보완수사권 유지·중수청법 연기
소속의원 110명 전원 명의로 제출

국민의힘이 15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시행을 연기하는 ‘범죄 피해자 보호 3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박규택 당 법률자문위원장 및 원내부대표단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를 찾아 당이 마련한 ‘범죄 피해자 보호 3법(형사소송법·중수청·공소청법 개정안)’을 소속 의원 110명 전원 명의로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보면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이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불송치에 대한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불송치에 대한 검사 직권 재수사 요청을 경찰이 미이행할 경우, 사법경찰관의 수사과정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를 미이행할 경우 등에 대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했다.

박 위원장은 “경찰에서 독단적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해야 할 사건 범위를 대폭 늘렸다”며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뿐만 아니라 직접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발생한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과 같은 중대 범죄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수사 개시 시점부터 관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이 수사 개시를 통보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협력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했다”고 말했다.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이 마무리된 뒤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할 수 있도록 법 시행을 2027년 10월 2일로 1년 늦췄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박규택(가운데) 국민의힘 당 법률자문위원장 등 의원들이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인 형사소송법·공소청법·중수청법 개정안을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흉악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정략적 목적으로 무조건 취소하겠다는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기웅 원내부대표도 “이번 개정안은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지키기 위한 가장 최소한의 보장 장치”라며 “민주당에서도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저희 개정안에 동의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여당 일각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는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법안을 이르면 15일 심사할 예정이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전날(14일) 검사의 수사개시 금지와 보완수사요구를 원칙으로 하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건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법사위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1소위를 열고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의견을 토대로 심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박태홍 기자

“주가 누르기 방지법, 어떻게든 속도 내라”

》1면 ‘부동산 자산 비중…’서 계속

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 받았는데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도 아직 국회 상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어떻게든 협조를 해서 속도를 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장기 연체 채무자들에게 대한 적극적인 부채 탕감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으면 파

산면책하고 다시 재출발시키는 게 사회적으로 도움이 된다”며 적극 정책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연체 채무를 정리하는 것을 가지고 ‘그러면 누가 성실히 빚을 갚겠냐’라고 지적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일종의 선전,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누가 돈 몇 천만 원 때문에 신용불량 돼서 취직도 못하고, 예금 계좌도 개설 못하고 살고 싶겠냐. 입주 당하고 7년 버텨서 원리금 당감받아가지” 이렇게 마음먹고 (갚을) 능력이 있는데 베틀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게 더 손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히려 금융기관들이 장기 연체 채무자들을 가혹하게 관리하는 게 도덕적 해이”라며 “금융기관들은 원래 빌려줄 때 일정 수가 빚을 못 갚을 것을 각오하고 그 비용을 다 책정해서 다 이자로 받고 있다. 그래서 이거 정리하는 게 손해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온라인을 통해 즉석에서 질문을 받기도 했다. 레버리지 ETF 상품 관련 질문이 많았다. 질문을 취합한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분의 의견은 자본시장 체질 개선 관련이었다. 그중에서도 레버리지 ETF 상품에 대한 보완 또는 조정이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고 전했다. /서예진 기자 syj@